

날개단 코스닥... 자율·독립성 높이고 상장요건 완화

최종구 금융위원장 간담회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

“자본시장 모든 제도·인프라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정비”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독립성을 높이고,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한국거래소에 열린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모든 제도와 인프라를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혁신창업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코스닥 시장을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꼽았다.

그는 혁신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성장해 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원회

갈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의 대략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먼저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여준다”며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선출하고 코넥스 기업, 투자자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

도록 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스닥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심사 업무를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거래소의 경영성과 평가 체계도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아울러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개발하고 해당 지수에 기반한 ETF(상장지수펀드) 등 다양한 상품 출시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상장요건은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최 위원장은 “그간 상장을 차단해왔던 ‘계속사업이익 요건’ ‘자본잠식 요건’을 과감히 폐지하겠다”며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는 등 상장요건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 요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테슬라요건 상장 실적에 있는 우수

상장주관사와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엔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는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상장 실질심사요건을 확대해 부실상장기업에 조기에 적발, 퇴출하고 상장시 보호예수 의무는 확대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또 “비상장 시장에서 코넥스 시장, 코스닥 시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성장 사다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개편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다양한 모험자본을 공급, 중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들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스닥 상장기업, 예비 상장기업, 증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일 발표하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백운규 장관, 정책자문위 개최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정책대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2018년 산업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정책자문위는 산업부 정책 방향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학계, 연구원, 전문직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정책자문관으로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가 그동안 추진한 정책과 올해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백 장관은 “산업부 정책이 책상 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자문관이 산업부의 한 식구로서 솔직하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정책자문위에서 논의된 의견을 이달 중 발표될 업무보고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현장과 전문가 목소리를 계속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한줄 News

정책·사회

▲ 문재인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 중 주요 정책과제인 ‘5대 신산업 선도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 서울시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행정 서비스에 도입한다.

산업

▲ 삼성전자가 2017년 한 해 매출 240조원과 영업이익 53조원을 기록했다. 잔치를 벌여도 아쉬울 실적이지만, 반도체 율리 심화와 악화된 경영 환경으로 삼성전자의 표정은 밝지 못하다.

▲ 한상범 LGD 부회장이 2020년 OLED TV 시장이 650만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따라 LG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 비중을 2020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

금융·마켓

▲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비은행·비이자 부문을 강화해 그룹의 수익을 다변화하고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는 경영전략을 내세웠다.

▲ 정부가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상장 문턱을 낮추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장 가능성을 무기로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기업이 늘고 있다.

유통

▲ 롯데그룹이 오는 10~11일 양일간 2018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한다. 신동빈 회장의 복심으로 그룹 내 2인자로 떠오른 황각규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1년 남은 중기중앙회장 선거, 벌써 물밑전?

중기협동조합법 의결 취소 회장 후보자격 강화에 제동

1년도 넘게 남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전이 벌써부터 서서히 전개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해 본회의 문턱을 앞두고 있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다시 법사위에서 ‘원안 의결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면서다.

중소기업계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지난 2015년 취임한 현 박성택 회장은 내년 2월 말까지다.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향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시 후보자의 자격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통과’했다가 ‘의결 취소’를 결정한 법사위의 관련 개정안 해프닝으로 선거 1년을 남겨놓고 전초전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체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기

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해 산자중기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다.

개정안엔 중기협동조합 이사장 임기를 두 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중기중앙회장 선출시 임후보 자격을 ‘정회원의 대표자’로 한정하는 등 선거 제도 개선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산자중기위에선 개정안 내용을 놓고 일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중기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중기중앙회의 권한 강화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항목은 처리 과정에서 빠졌다. 아울러 중기중앙회장 임후보 자격에 대한 규정을 놓고 일부에선 이견도 있었지만 결국 산자중기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산자중기위에서 넘어온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법사위까지 통과돼 본회의로 넘어가는 듯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거쳐 본격 시행되면 향후 중기중앙회장 선거 임후보자는 ‘회원의 대표자 또는 정회원

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가 아닌 ‘정회원의 대표자’만 가능해진다. 기존보다 자격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그런데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었다.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게 중기중앙회장 선출과 관련해 개정된 내용이 없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해서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는데 확인 결과 중앙회장 임후보 자격과 관련한 개정안이 있었다. 그래서 간사와 협의를 거쳐 문제제기를 했다.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원안 의결 부분을 취소하고 전체회의에 계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권 위원장은 당시 중기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최수규 차관에게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놓고 “(중기)중앙회장 임후보 자격과 관련한 논란은 없어졌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위원회가 이처럼 정부쪽 의견을 청취한 뒤 관련 개정안을 그대로 통

과시켰던 것이다.

권성동 의원실 관계자는 “각 위원회에서 넘어온 수많은 개정안을 (법사위 소속)의원들이 꼼꼼히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 법안도 정부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차관에게 ‘문제될 소지가 있느냐’ 질의했고, 차관이 ‘없다’고 답해 통과를 시켰다가 나중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을 알고 계류하게 됐다”면서 “이후 회의 진행과정에서 차관에게 추가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차관이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추가로 확인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면서 계류된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초 선거를 염두에 두고 중기중앙회장 후보의 자격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려면 법안이 국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이처럼 제동이 걸린 것이다.

중소기업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중기중앙회는 정회원의 대표를 넘어 중소기업의 대표 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회원의 대표만이 중앙회장에 임후보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과거처럼 정회원의 추천을 받으면 회장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곡물 중심’ 해외진출, 품목 확대·연관산업 동반공략

농식품부, 5개년 종합계획 미래식량공급기반 확보 추진

정부가 해외 농업진출 확대를 통한 농산업 국제경쟁력 향상과 미래식량공급기반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해외진출 지원품목을 다양화하고, 진출 농기업과 농기자재 기업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산업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농업자원개발 5개년

(2018~2022) 종합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민간단체 설립, 해외농업센터 개설 등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곡물수급 불안 대비, 해외농지확보 및 곡물생산 등 식량공급기반 구축에 주력했다. 그 결과 5년 새 해외 개발면적이 33% 증가하고 해외 식량확보량도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냈지만 해외 진출기업이 현재에 적응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진출품목 확대와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의 동반진출을 확대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초기 적응을 위한 농지임차·자재비 등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진출자금 등 정책지원 대상자 선정시 국내 수입이 많은 식품 원료를 품목으로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곡물과 같이 지원해 진출분야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러시아 등 북방지역과 동남아 지역을 해외진출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북방지역은 기업진출과 투자를 확대해 미래 동북아 식량생산기지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영농여건이 비교적 낙후된 동남아 지역은 국내 선진 영농·가공 기술의 현지적용을 중심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곡물중심의 해외농장개발에서 농산업 전반의 해외진출로 개편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5년간 구체적인 세부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